

양적 팽창 불구 질적 향상 미흡

유치원 교육 어디까지 왔나

교육부가 유치원 입학연령을 현재의 4살에서 3살로 낮추는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유치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높아지고 있다.

유치원 교육은 미취학 어린이들의 능력을 조기 개발하고 국민 기초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한다는 점에서 전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교육행정의 사각지대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최근 유치원 교육의 공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과정이나 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 체계정비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은 그동안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 지난 80년 9백여개에 불과하던 유치원 수가 현재는 1만1천여개(새마을 유아원 포함)로 10배 이상 늘었고, 취원율도 5살 어린이를 기준으로 80년 7.3%에서 52.4%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만큼 유치원 교육의 질적 향상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계층간 취원율의 차이, 과중한 교육비 부담, 조기교육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등은 그동안 유치원 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학부모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 이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꼽히고 있다.

유치원 납입금은 지난 84년 자율화 조치 이후 해마다 인상을 거듭해 현재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매월 5만~6만원선 안팎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납입금 수준은 현행 중학교 수업료의 3배, 고등학교 수업료의 2배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에 간식비·차량비·재료비·견학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학부모가 안고 있는 부담은 만만하지 않은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의 유치원이 한번 다니기 시작한 원생들을 묶어두기 위해 '관례'라는 명목으로 3~6개월치 납입금을 미리 받고 있어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도 일부 부유층 학부모의 그릇된 교육열에 편승해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경쟁적으

로 생겨난 초호화판 유치원은 빈부간의 위화감마저 조성하고 있다. 이 호화 유치원들은 수영장, 동물사육장 등까지 갖춰놓고 학부로 유치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납입금도 월 10만원선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방학기간 동안 과목당 3만원 정도씩을 받고 영어·미술·음악 등에 대한 특별 과외수업을 실시하는 유치원마저 일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호화 유치원은 논외로 친다 할지라도 저소득층의 유치원 교육비 경감문제는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당장 해결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들이 대부분 사립으로 국

10년새 취원율 52%로 급성장 비싼 납입금·프로그램 개발등 과제

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마을유아원을 제외한 전국의 유치원 수는 공립 4천6백 곳, 사립 3천8백 곳 등 8천4백 곳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국교 병설 공립 유치원은 2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천3백6곳은 모두 사립 유치원이다. 이는 국민학교 자체가 과밀학급, 2부제 수업 등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치원을 병설할 유휴교실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는 오는 93년까지 공립 유아원 2백87곳을 유치원으로 전환하고 독립시설의 공립 유치원 신설 및 국민학교 병설 유치원 증설을 적극 추진하는 등 도시 영세지역 공립 유치원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또 사립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연수 경비 및 교육자료 보급 등 예산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오는 93년부터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도 세워놓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내부부에서 관장해 오던 새마을 유아원이 교육부로 넘어옴에 따라 이 가운데 7백34곳을 유치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어린이의 유치원 교육을 위해 매달 평균 5~6만원선에 이르는 과도한 납입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으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재정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필요성이 현실화되기란 기대하기란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유치원들의 과도한 납입금 책정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쳐 과중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노력은 꾸준히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교사용 교육자료 개발·보급과 함께 현재 37%에 달하는 공립 유치원 전임강사들의 정규교사화 등 유아교육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도 유치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종구 기자〉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구상은 현재로서는 '도상계획'에 머물고 있을 뿐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96년까지 유치원 교육의 공공교육화 기반을 조성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공교육화 개념 자체가 국가의 총괄적인 지원수준이 아니라 교육내용·시설 등에 국가가 관여한다는 정도일 뿐"이라고 한계를 털어놓았다.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아교육도 국민학교처럼 의무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